

NEWS & NEWS

News & News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하라” 전국 곳곳서 “메아리” 각 지부 가두캠페인·성명서 발표 부당성 호소

“구강보건전담부서 즉각 부활 및 관련 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지난 6월 9일 치아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난 6월 8~10일 전국적으로 열린 제 62회 치아의 날 행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제주, 강원, 울산, 대구, 광주지부를 비롯한 각 지부들은 이 같은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 길기대회,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해체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담 부서 부활이라는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특히 경기지부(회장 김성일)는 6월 8일 구강보건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구강보건전담부서 해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2천여부의 전단지들을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신문인 경인일보 당일자 1면에 관련 광고를 게재해 도민들에게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6월 9~10일 치아의 날 행사를 치른 서울, 대전, 강원, 울산, 제주, 대구, 광주지부 역시 “보건복지부는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열악한 국민 구강건강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팀의 해체와 역량의 축소라는 상식 밖의 비이성적 조치를 통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구강보건팀이 없는 국가이자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팀에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보건복지부가 자초하고 있다”며 구강보건전담부서 해체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서울지부(회장 김성욱)는 지난 10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치아의 날 행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행사에 참석한 안성모 협회장, 김성욱 서울지부 회장, 25개구 회장 등을 비롯한 전 치과 의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지부는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즉각 부활시킬 것”과 “정부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치과계의 결의를 보여줬다.

News & News

FDI 총회 유치 전략 들었다 국제위, 역대 담당이사 간담회

2013년 세계치과외사연맹(이하 FDI) 총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치협의 활동에 대해 역대 국제이사들이 소중한 조언을 건넸다.

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문준식)는 지난 6월 20일 역대 국제이사 간담회를 개최해 각종 국제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FDI 총회 유치 전략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에서 김동기 부회장, 문준식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이기택 치협 고문, 조항작 전 국제이사 등 치협 역대 국제이사를 역임한 중량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이기택 치협 고문은 재임 당시 FDI와 아시아·태평양치과외사연맹(이하 APDF)을 동시에 개최한 바 있으며, 양정강 전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치협 부회장, APDF 재무, APDF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조항작 전 이사는 APDF 부회장을 연임하는 등 각각 치협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위

원장인 문준식 이사는 치협이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전개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역대 국제이사들은 이에 대해 이미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담당이사는 물론 현 집행부의 회장단이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단합된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가까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치협은 지난 2005년 4월 FDI 본부에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식 유치신청서를 제출, 오는 2013년 제101차 총회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친구·가족 손잡고 축제한마당 펼쳤다” 제46차 치협 종합학술대회 성료

치과의사, 그들의 가족,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기자재업체가 모두 함께 어우러진 '2007 제46회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가 3일간의 축제를 뒤로 하고 지난 6월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엑스 신관 및 대서양홀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치협 학술대회는 '학술과 문화의 만남', '치과의사와 가족의 만남'을 기치로 내걸고 국내 최고의 등록인원이 참가해 사전 및 현장등록을 통해 7500여명(사전등록 6400여명, 현장등록 1100여명)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를 결집시켰다.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크게 학술 프로그램과 치과기자재전시회, 패밀리 프로그램 등 문화행사를 기획해 치과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기자재에 대한 정보도 습득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주말을 이용해 공부하려는 치과의사들을 배려해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고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 e-게임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 길거리 화가 등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오정환 원장(본 치과의원은)은 “부인과 아들, 딸, 조카와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가족들을 배려해 놀이방을 운영한 것은

참 좋았다. 동기 등 친구들도 가족들과 손을 잡고 온 것을 보았다. 놀이방 덕분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학술대회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또 “앞으로도 학술대회 땀 어린 자녀들을 위한 배려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특히 부모들이 계속 돌봐줘야 하는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하게 마련되면 좋겠다. 게임대회의 경우 고학년이 참가하는데 그들은 이미 부모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잃는 시기다. 오히려 저학년을 위한 그림대회나 글짓기 대회 등을 마련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백세인을 위한 치의학’을 주제로 한 학술프로그램과 관련 특강 12개, 심포지엄 7개에 따른 연세 23개, 임상강좌 17개, 패널토의 4개, 교양강좌 2개, 최신지견 6개, 구연 19개, 테이블클리닉 4개, 포스터 42개, 치과위생사를 위한 강연 3개 등 132개의 풍성하고 다양한 연제가 마련됐다.

학술강연에서는 ▲임플란트 ▲심미치과 ▲Future Dentistry ▲일본 치과계 현황 ▲노인치의학 ▲스포츠치의학 ▲보철 ▲Tooth Bio-Engineering ▲진료실 감염 ▲여자치과의사 리더십 ▲보건의료정책 ▲Digital Dentistry ▲레이저 Dentistry ▲근관치료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지침서 제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 이하 심의위)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지침서를 제작했다. 심의위는 의료광고가 완화된 직후인 4월 초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243건의 의료광고 심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의료광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지침서로 제작했다. 이 지침서에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개원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대상에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해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포함되며, 심의 대상 제외 광고 매체에는 ▲LED 광고 ▲택시 부착물 광고 ▲버스 부착물 광고(사전심의 유도) ▲동영상 광고(기관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녹음) 광고(버스, 지하철) ▲홈페이지 등으로 분류된다.

또 특정 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 또는 유사 진료 내용 등을 최근 심의위에서 광고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개 진료과목 중 5개과 이상을 표시하면 광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지침서 내용 중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해석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소지가 있는 ‘10가지 광고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첨부해 의료광고 심의의 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 밖에 심의위는 심의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심의결과 통보 원칙 확인을 비롯해 같은 광고 1건을 2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와 광고 내용이 전혀 다른 2건의 광고를 1개의 의료기관에서 심의를 신청한 경우 광고 건수를 2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4월 이후 의료광고를 심의해 온 결과 올바른 광고 심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다수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광고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